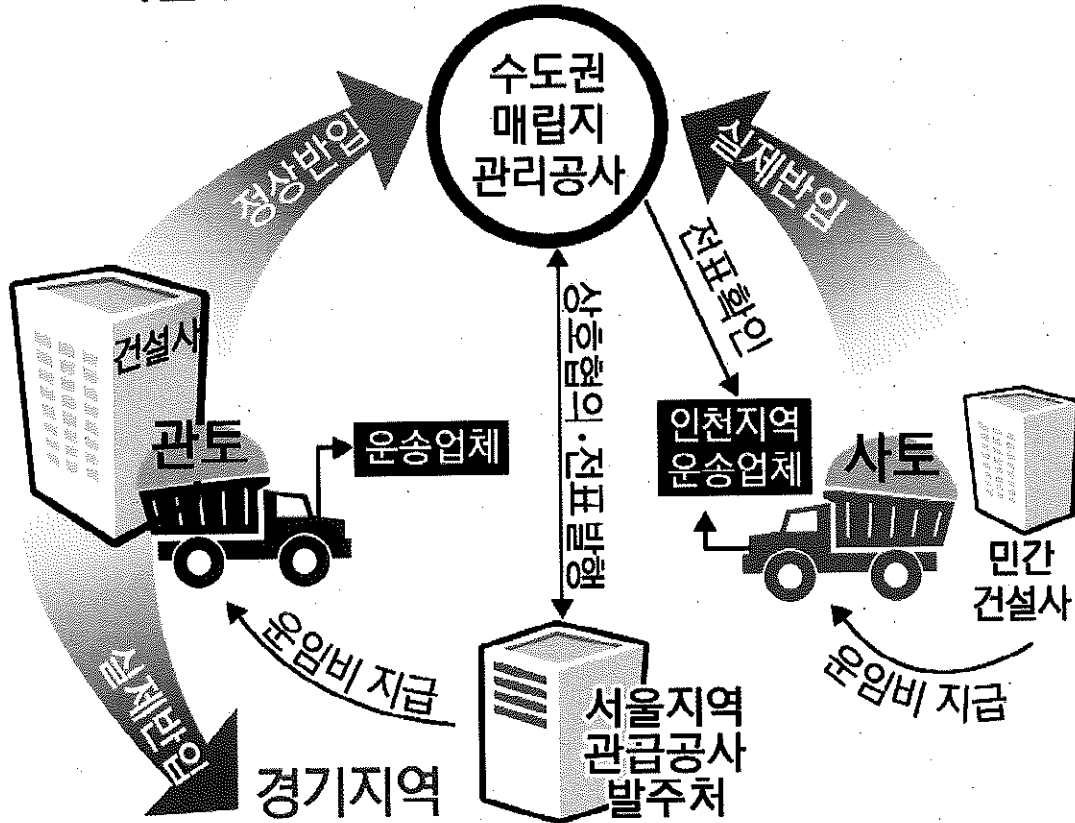


수도권매립지 반입 관급토사 '전표환치기'

김영래·이원근공승배 기자 발행일 2019-09-19 제1면

서울 관급토사 수도권매립지 반입 흐름도



운송업체 서울 물량 경기도에 반출
 대신 인천 사토 가져가 '전표' 끊고
 관급공사 발주처에 전달 비용 받아
 불법행위로 '이중 수익' 올리는 셈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어야 할 서울지역 관급공사장들의 관급토사(공사현장에서 나오는 흙, 관토) 상당량이 매립지가 아닌 경기도내 농지 등으로 불법 반출되고, 대신 인천지역 민간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토(私土)가 관토로 둔갑, 불법 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많게는 1일 평균 4천830m³ 규모로, 이는 23t 덤프트럭 320여대 분량으로 운송비 예산만 1일 8천여만원 상당이다.

이 과정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유통경로를 확인하지 않고 관토 반입(출)전표를 발행하고, 서울지역

관급공사 발주처는 그 전표를 통해 세금으로 운송료를 지급해주는 일명 '전표 환치기'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18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매립지공사)와 서울지역 관급공사 발주처, 운송업체 등에 따르면 서울시 설공단, 남부수도사업소 등 서울지역 24곳의 공공기관은 500여곳의 관급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관토에 대해 매립지공사와 '관급토 반입(출)협약'을 맺고 매립지로 반입시키고 있다.

그러나 매립지로의 반입을 위탁받은 운송업체 대부분이 고속도로 통행료를 비롯 물류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매립지가 아닌 경기지역 농지 등에 관토를 반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지역에서 13㎥(23t 덤프트럭 분량)의 관토 물량이 발생하면 매립지와 가까운 인천지역 민간아파트개발현장에서 발생한 사토 13㎥를 관토로 둔갑시켜 매립지에 반입시키고 있는 것이다.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매립지공사와 서울지역 관급공사 발주처가 맺은 관토 반입(출)협약 기준에 따른 반입물량은 30만3천92㎥ 규모, 23t 덤프트럭 2만3천대 분량으로 이중 일부가 이와같은 방식으로 매립지에 반입됐다. 운송비만 전체 60억원대에 이른다.

결국 전표거래 뒤에는 운송업체가 관토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별도의 처리비용 없이 사토까지 처리하면서 이중으로 운송비 수익을 올리고 있는 셈이다.

운송업체 한 관계자는 "매립지 공사가 매립지 운영에 필요한 흙의 규격만 맞으면 전표를 발행해주고, 서울 지역 관급공사발주처도 이를 근거로 운송료를 지불해 일명 '전표 환치기'가 이뤄진다"고 했다.

이에 대해 매립지 공사 관계자는 "운송업체가 발주처와 공사장 명을 적은 표식을 붙이고 반입해 사실상 유통경로는 알 수 없다"고 해명했다. 관급공사 발주처 관계자도 "관토 반입(출)에 대해 전표로 운송료를 지급하고 있다. 유통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구조"라고 했다. → 그래픽 참조

/김영래·이원근·공승배기자 yrk@kyeongin.com

'관토' 둔갑한 '사토'... 반입구조 빈틈 이용 '수십억 부당이익'

'전표환치기' 막을 수 없었나

김영래·김동필 기자 발행일 2019-09-19 제3면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돼야 할 서울지역 관토 상당량이 경기도내 농지로 불법 반출되고 인천지역 민간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토가 관토로 불법 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18일 인천 수도권 매립지3-1공구 모습.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발주처가 거리따라 운송비 지급
 통행과정 역추적하면 확인 가능
 "매립지공등 묵인 않고서 어려워"**

관토를 이용한 일명 '전표 환치기' 반입구조 상 운송업체가 수년간 최소 수십억~수백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공사가 관토 반입 전표를 발행하면 서울지역 관급공사발주처가 운송비를 지급하는데 거리에 따라 1㎡당 2만1천~2만3천원을 책정(27만3천여원)해 운송업체에 지급한다.

그러나 운송업체는 가까운 경기지역 등 수도권지역 농지 등에 관토를 불법 반출해 절반 이상의 운송비를

절감한다.

이 같은 행위가 이뤄진 뒤 인천지역 운송업체는 민간아파트 개발 현장에서 6만~8만원 가량의 운송료를 지급받고 반출한 사토를 관토로 둔갑시켜 매립지로 불법 반입시킨다.

서울 운송업체는 서울지역 관급공사발주처로부터 운송비를 지급받아 인천지역 운송업체와 이익금을 배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사토가 관토로 둔갑해 매립지로 불법 반입되는 과정에서 운송업자들은 운송비를 챙기고, 1일 평균 300여대가 이 같은 방식으로 전표가 발행된다면 연간 수십억원대의 부당이득이 생기는 '전표 환치기' 구조다.

특히 인천지역 일부 운송업체들은 매립지공사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토를 관토로 둔갑시켜 매립지에 반입하는 인천지역 운송업체의 차량번호로 전표가 발행돼 이들 차량의 통행과정을 역추적하면 반출처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인일보는 이들 운송업체의 주장을 근거로 서울 지역은 관토 반출 경로를 역추적했고, 인천지역 민간아파트개발현장에서 나온 사토가 관토로 둔갑해 유입되는 과정을 확인했다.

과거 폐기물을 일반 쓰레기로 둔갑시켜 매립지에 반입돼 불법 수익을 챙기던 수법이 '전표 환치기' 방식으로 진화한 것이다.

인천지역 운송업체 관계자는 "도로에 폐쇄회로(CC)TV만 확인해도 관토 반입(출)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며 "수년간 이뤄진 행위로 매립지 공사와 관급공사 발주처가 묵인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고 주장했다.

/김영래·김동필기자 yrk@kyeongin.com